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통일부, 김정은 신년사 중 핵무력 강화 언급 규탄

○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음.

- 통일부는 1일 정준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이 핵개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뿐임을 거듭 경고한다"며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과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 등 통전 책동을 지속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뉴스1, 통일부, 北신년사 '핵무력 강화' 등 언급에 "강력 규탄", 2017.01.01.

통일부, 새로운 비전 제시 부족하다고 평가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김정은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는 신년사"라고 평가하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기조만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며 "김정은의 마지막 자책까지 곁들여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음.

노컷뉴스, 통일부 "北 신년사, 새로운 비전제시 없어", 2017.01.02.

대북제재위원회, 2016년 북한의 결의 위반 의심 사례 집계(18건)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 연례보고서'에서는 2016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사례는 총 18건으로 집계되었음.

- 이 중 15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고, 나머지 3건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직접 차단한 사례임.

○ 2016년 3월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과 개인 수하물 등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는 2016년 7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3개 나라가 기존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음.

뉴스1. 유엔 안보리 제재위 "北, 지난해 결의위반 의심사례 18건". 2017.01.03.

통일부, 비핵화·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 방침 발표

○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통일부는 2017년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음.

○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노컷뉴스. 통일부 "北 비핵화·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 2017.01.04.

북한의 대중 파견 노동자 임금 상승

○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 중국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2~3년 전에 비해 15~2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음.

-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단둥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단순노동을 하는 식품가공회사의 경우 월평균 1,800위안(31만 원) 정도,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봉제공의 경우 2,300~2,500위안(39만~43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음.

- 과거에 비해 단순 노동직은 300위안(5만 원), 봉제공은 300~500위안(5만~8만 원) 정도가 오른 셈임.

○ 소식통은 "이는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라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인건비를 더 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중국기업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외에 숙식을 별도로 제공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주택과 생활비까지 보장해줘야 하는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서도 "이직과 결근이 잦은 중국 노동자들에 비해 북한 노동자들은 성실하게 일해 생산성이 높아 (중국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음.

뉴스1. "중국 파견 北노동자 임금, 2~3년 전보다 15~20% 상승". 2017.01.17.

북한 관광객의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

○ 영국의 북한전문여행사 '루파인 트래블'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북한 관광)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면서 2017년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 2016년 1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되고, 2016년 3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시행되면서 예약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해리스 대표는 말했음.

- 대북제재는 북한 관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 고조는 관광객들이 약간 걱정하는 정도일 뿐 여행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방송은 평가했음.

- 여행사 측은 "핵과 미사일 시험이 관광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길어야 2주 정도"라며 2017년 모두 33차례 북한지역 단체관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여행사는 특히 관광업계 최초로 하루 동안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 등을 둘러보는 평양 시내 도보관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네덜란드의 '유어 플래닛 트래블'사는 "2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북한 여행 다큐멘터리들이 여러 편 방송돼 북한 관광이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자전거 여행, 러시아를 통한 기차 관광, 전세기를 이용한 백두산관광 등 매년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음.

연합뉴스. "대북제재에도 北관광객 20% 증가…도보관광 출시 예정". 2017.01.18.

통일부, 남북경협기업 지원 요구에 대한 검토·협의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이외 남북 경협기업들이 입은 자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음.

○ 이 당국자는 "해당 기업들이 경협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전체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나 정책적 수당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 또한 이 당국자는 ▲겨레말 웹사전 시스템 구축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백두산화산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관계 개선시 산림협력 인프라로 활용할 양묘장 조성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인구 총조사사업 등 사업 계획도 설명했음.

뉴스1. 통일부 당국자 "남북경협기업 지원요구, 협의 중…합리성 있다". 2017.01.24.

북한의 기업 자율경영 확대 방침 관측

○ 북한 당국이 기업 운영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는 '자율경영'을 2017년부터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음.

○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 기업인은 북한 당국이 2017년부터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 증대를 꾀할 것이라고 RFA에 주장했음.

- 이 기업인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2016년 초부터 모범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경영을 시험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업 운영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음.
- 북한이 실시한 자율경영의 골자는 기업이 임금과 인력 규모, 운영자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달하는 대신 일정액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음.
- 이런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기업체나 각지의 경제개발구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며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음.

연합뉴스. "北, 기업 자율경영 확대 방침…자본주의 요소 적용". 2017.01.26.

북한의 국산품 애호운동 성과 부진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산품 애호운동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음. 방송은 북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제품 생산에 나섰지만 열악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전국의 주요 식료공장들에서 시작된 판매부진 현상이 피복류를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들과 외화벌이 기관들까지 번지고 있다"며 "제품 판로가 막힌 경공업 공장들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만포시 '압록강 타이어공장'에서 생산한 고무장갑 중 빨래 장갑은 중국 돈 5위안(한화 850원), 어업용 고무장갑은 중국 돈 12위안으로 중국산 제품과 비슷한 가격이지만 품질은 훨씬 뒤떨어진다고 설명했음.

○ 양강도 소식통은 "혜산 기초식품공장에서는 제품이 팔리지 않자 아예 유효기간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양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음.

노컷뉴스. "北, 국산품 애호운동 실패…열악한 품질 때문". 2017.02.01.

EU, '유엔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 추가이행안 발표

○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발표했음.

- 이번 추가제재안은 2016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EU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엔 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
- EU는 유엔 결의 2321호 이외에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음.

○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에서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했음.

- 또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교통 및 금융, 재산 관련 영역에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음.
-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과학 관련 교류를 금지하도록 했음.

연합뉴스. EU, '유엔 결의 2321호' 이행 위한 대북 추가제재이행안 발표. 2017.02.27.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 금융제재 강화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음.

○ 27일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2017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갖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음.

-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등 두 차례의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했음. FATF 사무국은 201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영한 FATF 기준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번 총회에 보고했음. FATF는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개최되는 차기 총회에서 마련하기로 했음.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총회에 참석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방향에 합의하고 국경 간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세계일보.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 금융제재 강화. 2017.02.27.

유엔 11개 회원국, 대북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제출

○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17년 2월 28일 11개 회원국이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음.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2017년 2월 28일 RFA에 "안보리의 최근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의 마감일에 맞춰 총 11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

-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과 모나코, 미국,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모두 11개국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음.
-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종료됐지만, 안보리는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까지 77개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21호와 이전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RFA는 덧붙였음.

연합뉴스. "유엔 11개 회원국, 대북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제출". 2017.03.02.

북한의 경제 연구자, 대북 석탄 교역 제재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

○ 대(對)중국 석탄 수출길이 가로막힌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를 통해 "외화수입에서 석탄 비중이 작다"며 제재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나섰음.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연구사는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신보가 2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 리 연구사는 '적대 세력들은 유엔 제재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들이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조선(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조선신보 기자의 지적에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면 석탄 수출액은 나라의 외화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또 "지금까지도 국내의 탄광기업소들에서 채굴한 석탄은 국내의 요구하는 단위들에 공급, 판매되여 왔음. 앞으로 석탄의 국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석탄 생산이 '내수용'임을 강조했음.

○ 리 연구사는 석탄의 국내 사용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거론하기도 했음.

- 그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이 "값비싼 수입원료 대신에 국내에 흔한 석탄으로 메타놀(메탄올)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업"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업이 실현되면 국내의 석탄이 더 많이 쓰이게 된다"고 밝혔음.

- 리 연구사는 조선신보 인터뷰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외화수입을 막으면 핵무력 강화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적 국방공업의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한 자들의 망상"이라고도 주장했음.
  • 석탄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에서도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북한 외화벌이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연합뉴스. 北 "외화수입서 석탄 비중 작다"…제재효과 '평가절하'. 2017.03.02.

북한의 공식시장, 436개로 확인

○ 북한의 공식 시장의 수가 436개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 RFA는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이는 2015년에 확인된 396개에서 40개나 더 늘어난 수치임.
  • 멜빈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서만 새로 생기거나 확장·보수된 시장이 100여개에 이른다며 앞으로 시장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음.

○ 실제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은 2016년 5월부터 오래된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지붕을 덮었으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2016년 10월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던 평양시 강동에도 강동시장이 새로 조성되었음. 하루 시장 이용객은 평균 100만~180만명으로 추산됨.

뉴스1. "北 공식시장 436개 확인…2015년보다 40개 증가"-RFA. 2017.03.16.

미국, 대북 제재 현대화법 추진 및 석유 수입 및 위안화 거래 차단 시도

○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1일(현지 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내놓은 대북 제재 중 '역대급'으로 평가할 만큼 강도가 높음.

-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막고, 달러화는 물론이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금융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임. 이 법안에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임.

○ 법안의 목표는 달러의 평양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16년 1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 강화법'과 5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빠졌던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음.

-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음. 북한의 핵미사일 재원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음.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음. 2016년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유 금수 조치만 담고 있음. 안보리 제재 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도록 한 게 효과적 대북 제재에 걸림돌이 됐다고 본 것임.

-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음.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으로 보내는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외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됨. 최근 북한 은행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됐지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외국 은행과 거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임.

- 법안은 중국 등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음. 2016년 통과된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애매하게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외국(foreign)'으로 명시했음.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것임.

동아일보. 北 석유수입-위안화 거래까지 차단. 2017.03.23.

2013년도 중국의 대북 원유 송유량,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유상으로 추정

○ 중국은 2014년부터 무역 통계에서 대북 원유 수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2013년 통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판매한 연간 원유량은 약 59만 톤이었음.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매년 50만 톤은 무상으로, 50만 톤은 유상으로 주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음.

- 북한으로 가는 원유는 중국 헤이룽장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생산함. 이 원유는 북·중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의 봉화화학공장(정제공장)을 연결한 압록강 지하 송유관을 통해 북으로 흘러감. 북한은 봉화화학공장에서 만드는 가솔린 등은 자체 소비하고 LPG는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가 큼. 한 번 차단하면 송유관이 막히는 기술적 이유도 있음. 원유 공급을 끊으면 파라핀 같은 원유 찌꺼기가 송유관을 막아 나중에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임. 중국이 연간 공급하는 원유 100만 톤은 북한 생존을 위한 최소량이라는 관측도 있음.
- 그러나 최근 평양에선 교통 정체가 생길 정도로 차량 운행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이 100만 톤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됨. 과거에는 러시아도 북한에 원유를 보냈으나, 지금은 북·러 국경에서 일부 가솔린 제품만 거래되는 수준임.

조선일보. 中이 매년 北에 보내는 원유… "50만t은 무상, 50만t은 유상". 2017.03.23.

북한의 종합시장 현황

○ 북한 당국이 공식 허가한 '종합시장'이 15년 만에 40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구글어스를 활용해 위치를 체크한 뒤, 북한 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수치임.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시장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에 실린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종합시장의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 북한의 종합시장은 2003년 북한 당국에 공식 허가된 시장임. 해당 도와 시 당국이 허가한 장소에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자릿세 및 장세를 내고 장사하는 곳임.

○ 북한 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을 허용한 뒤, 시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시장'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음.

- 생산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전국적 유통망의 핵심동력으로 종합시장이 입지한 도시는 세금 징수는 물론 운송 및 편의시설이 조성돼 각종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음.
- 보고서 분석 결과 2016년 12월 기준 북한 내에는 404개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도별 평균 시장개수는 40.5개로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한 평안남도 지역이 116개로 가장 많았고, 양강도가 17개로 가장 적었음. 전체 시장의 면적은 183만 9,582㎡(55만 6474평)였음. 일산 신도시 면적(157만 4,000㎡) 보다 크고 여의도(290만㎡)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임.

○ 종합시장 내 총 매대수는 109만 2,992개, 시장 1개당 2,836개였음. 종합시장 1개당 상대하는 인구는 평균 5만 6,696명이었고, 종합시장 관련 전체 종사자수는 북한 전체 인구의 4.4~4.6%인 109만 9,052명으로 추정되었음.

세계일보. 北 '종합시장' 15년만에 404개로 성장…백화점식 시장도 등장. 2017.03.29.

◆ 대외무역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 재개(추정)

○ 중국이 2016년 말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017년 1월 4일 보도했음.

○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2017년 1월 1~3일 중국 대표 석탄 수출입항인 친황다오(秦皇島) 항구로부터 약 10㎞ 떨어진 지점에서 금릉5호, 금산호, 원산2호 등 북한 선박 3척이 머무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 석탄 취급항인 룽커우(龍口)와 펑라이(蓬萊)에는 각각 북한 선박 금해호와 금호 1호가 입항한 채 정박해 있었으며, 룽커우 항구에서 약 2km 지점과 10km 지점에는 각각 또 다른 북한 선박 수송호와 전운 68호가 각각 대기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음.
- 옌타이(煙臺), 르자오(日照), 란산(嵐山)항 등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어도 총 8척의 북한 선박이 머물고 있었음.

세계일보. 중,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한 듯. 2017.01.04.

북한-중국 간 수산물 가공교역 활성화

○ 중국 훈춘(琿春)시 수산물 가공업 일부 업체들이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물 가공의 북한에 하청을 주기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훈춘시가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북한에서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반입하기 시작했다며 가공업체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단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고 방송은 전했음.

- 방송에 따르면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2016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훈춘경제합작구에 들어선 수산물가공업체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연태대신 등 약 58개에 달함.
- 훈춘시는 2016년 중국 해관총서가 북한 나선시 원정리와 인접한 취안허(圈河) 통상구 세관을 북한 수산물 전용 통관장으로 지정했음.

연합뉴스. 북·중, 수산물 가공교역 '활발'…제재 틈새 뚫기. 2017.01.20.

중국의 2016년 대북 석탄 수입량 증가

○ 중국이 2016년 말 북한산 석탄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수입이 200만 톤에 이르러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중국의 세관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수입물량은 11월의 190만 톤보다 많은 것으로, 월간 수입량으론 2016년 4월 이래 최대임.
-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은 2016년 전체적으론 2,250만 톤에 달해 그 이전 해보다 14.5% 증가했음.

연합뉴스. 中, 12월 대북 석탄수입 일시중단 조치에도 수입량 늘어. 2017.01.24.

중국의 대북 금수 리스트 확대

○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업정보화부·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가원자력기구·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리스트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음.

- 공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공고일(25일)부터 집행한다"고 명시했음.
- 이소시안산염·질산암모늄 등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을 비롯해 원심분리기 등 두 가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이 포함되었음.

중앙일보. 중국 대북 금수리스트 대폭 추가 … 재래식 무기 물자 첫 포함. 2017.01.26.

2016년도 남북 교역 규모(3억 달러)

○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1월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남북교역 규모는 3억 3,300만 달러로 1998년 2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음.
- 남북교역 규모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햇볕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임.

○ 이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2월 10일 남북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2016년 남북교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27억 1,400만 달러의 1/10분의 수준으로 급감했음.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한과 남한을 오가는 인원도 개성공단을 포함해 1만 4,787명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왕래 인원은 2002년 1만 3,877명에서 2008년 18만 6,77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다소 줄어 13만 2,101명을 기록했음. 2016년 남북 왕래 인원도 2015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임.

연합뉴스. 작년 남북교역 규모 3억달러…1998년 이후 최저. 2017.01.29.

2016년 북한-중국 간 광산물 수출입 증가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일 내놓은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2016년 북한 주요광물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14억 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음.

-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석탄은 판매단가가 떨어졌음에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12.5% 늘어난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음.

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구멍'…北광물자원, 작년 中수출 11%↑. 2017.02.09.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 중단

○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알렸음.

연합뉴스.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2017.02.19.

북한-중국 간 석탄 밀무역 활성화

○ 중국 대북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 다음날인 20일에도 일조(르자오)항에는 북한 석탄을 실은 배가 들어와 품질 검사를 끝낸 뒤 하차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공식적인 북한 석탄 수입은 모두 중지됐지만, 일조항으로는 통관을 거치지 않은 석탄들이 계속 들어왔었던 것"이라고 전했음.

○ 소식통은 이어 "북한 무역회사들은 2017년 상반기 석탄수출입 지표를 이미 체결한 상태라 어떻게든 외화벌이를 계속해야 했던 것"이라면서 "다만 오늘부터 통제가 강화돼서 석탄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데일리NK. "中 '北석탄 수입 중지' 조치에도 석탄 밀무역 활발". 2017.02.23.

북한-EU 간 교역액 감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북한과 유럽연합(EU)사이의 교역액이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음.

- VO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인용, 2016년 북한과 EU간 교역액이 약 2,900만 달러(한화 330억 원)로 전년과 비교해 6.6% 줄어들며 3년째 감소했다고 밝혔음.
- 2016년 양측간 교역 규모는 최고 정점을 기록했던 2006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음.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음.
- VOA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이 EU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화학 관련 제품(약 840만 달러)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24% 늘어났음. 2위는 기계류(약 4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연합뉴스. "북한-EU 교역액 3년째 감소…10년전의 1/10 수준". 2017.02.28.

북한, 대중 희귀광물 수출 중단

○ 북한이 중국의 석탄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맞서 중국에 대한 희귀광물 수출을 일부 중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에서 희귀광물 수출을 전면 중단한 시기는 2017년 1월 20일경부터"라며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조해 우리의(북한)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한 중앙의 보복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무산군에서 나오는 몰리브덴과 회령시에 있는 코발트 광산의 광물 수출은 완전히 중단됐다"고 전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양강도는 얼마 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며 "양강도에서 나오는 광물들은 전부 희귀광물들인데 수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말했음.

노컷뉴스. "北 희귀광물 對中 수출 중단…석탄 수입 중단에 보복". 2017.03.03.

2017년 1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규모(9,700만 달러)

○ 북한이 2017년 2월 중국에 수출한 석탄이 1,0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음.

- 이 매체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 "2017년 2월 북한은 중국에 석탄 약 9,700만 달러(한화 1,078억 원) 어치를 수출했다"고 밝혔음. 이는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3% 증가한 액수라고 VOA는 설명했음.
-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월 18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같은 달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연합뉴스. "北, 지난달 中에 석탄 1천억원어치 수출 …작년대비 43%↑". 2017.03.28.

◆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북한, 강령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총계획안 발표

○ 북한 대외선전용 사이트인 '내나라'는 '조선녹색위업연구개발협회' 명의의 '강령 국제녹색시범지대 개발 총계획안'을 게재한 것으로 5일 확인되었음.

○ 계획안은 북한이 2014년 강령군 강령읍에 만들기로 한 '국제녹색시범구'를 군 전역으로 확대해 '시범지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녹색산업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유기농 작물, 수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라고 설명했음.

- 지금의 원료 수출 위주에서 가공품 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공업개발구가 조성됐다며, 구체적으로 수산물·강냉이(옥수수)·잣·양파·왕밤 등의 가공 공장과 고구마 기능성식품 공장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음.
- 이 곳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결산이윤의 14% 수준으로 부과하고, 북한이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면 10%, 10년 이상 운영하면 감면 혹은 면제도 가능하다고 계획안은 밝혔음.
- 다만 '투자금지 및 제한사항'으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미풍양속에 지장을 주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수익성이 낮은 대상' 등을 언급했음.

○ 북한은 해삼과 가리비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생태 환경이 깨끗한 강령군을 친환경적 산업 위주의 시범 지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그림 1 북한의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자료: 연합뉴스. 2017.01.05.

연합뉴스. 北, NLL인접 강령에 농수산물 가공단지…"해외투자 유치". 2017.01.05.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합작 안내서 발간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맹목적' 대북 진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북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각종 사항을 안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음.

○ 방송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펴낸 '대외투자합작 안내서' 북한 편을 통해 대북 투자와 관련한 기본 정보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음.

- 안내서는 몇몇 중국 기업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진출했다가 손해를 본 일이 있다며, 대북 투자 시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기반시설 등 제반 환경을 충분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방송은 전했음.
- 특히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계약을 맺을 때는 대금 지급과 환율 관련 항목을 분명히 하라고 권고했다고 방송은 전했음. 안내서는 북한에서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큰 점도 지적했음.
- 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고 방송은 밝혔음.
- 다만 안내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발전 잠재력이 있고 노동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했고, 과거와 달리 북한 영주권을 받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방송에 따르면 안내서는 2015년 기준 북한의 일반 공장노동자 월급이 64~85달러이며, 사회보장비가 개월당 약 7달러 추가된다고 밝혔음.
- 방송은 중국의 2015년 대북 직접투자는 광산업, 제조업 등을 위주로 총 4,100만 달러(약 48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중국 상무부를 인용해 전했음.

연합뉴스. "中, 자국 기업에 '맹목적 북한진출 주의' 경고". 2017.01.18.

중국의 황금평 개발계획 포기(주장)

○ 중국이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던 황금평 개발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음.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북한의 섬임.

○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단둥의 소식통을 인용 "2011년 기공식을 올릴 당시 조성했던 중국에서 황금평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최근 중국 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보도했음.

- 이 소식통은 "이 길을 없앴다는 것은 중국 측에서 황금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접은 징후"라고 주장했음.
- 다른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은 애초부터 전문가들로부터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불러왔었다"면서 "대규모 수해가 나면 완전히 침수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등 기초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음.

- 이 밖에도 황금평 개발을 주도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12월처형된 것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RFA는 전했음.

뉴스1. 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개발 포기한 듯-RFA. 2017.01.20.

북한 노동당-러시아 통합러시아당, 극동 연해주 지역 협력 모색

○ 북한이 최근 러시아 집권당의 연해주 지부에 '당(黨) 대 당(黨)' 협력을 제안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2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매체인 프리마메디아를 인용 "림청일 북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2017년 1월 11일 통합러시아당 발렌틴 슈마토프 연해주 지역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보도했음.

- 북한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양측은 북한 노동당과 통합러시아당 사이의 문화, 관광, 과학, 의학,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음. 이는 주로 북러 양국간 경제협력이 이뤄져온 분야들임.

뉴스1. "北노동당-통합러시아당, 극동 연해주서 협력 모색"-RFA. 2017.01.25.

미국 국무부, 금강산 관광 투자 자제 요청

○ 북한이 금강산 관광 투자유치에 나선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음.

-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며 "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음.

○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을 통해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2만~3만 톤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외국 단독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000만~2,000만 달러(약 112억~225억 원)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임.

- 애덤스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음.

연합뉴스. 美, 유엔 회원국에 '北금강산 관광' 투자말라. 2017.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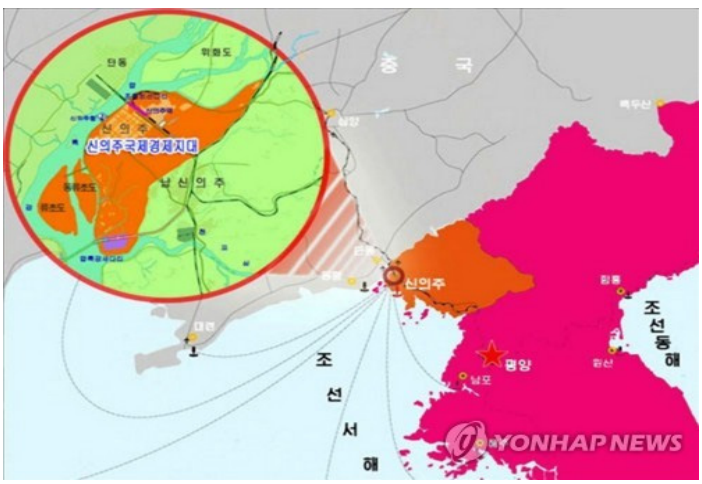
북한의 신의주특구 투자 유치 홍보

○ 북한이 15년 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신의주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음.

○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은 25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했음.

- 신의주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등 발달한 교통망을 통해 평양과 연결돼 있고,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이어져 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및 금융중심지로 전망이 밝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음.
-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기술적 토대와 사회·정치적 안정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요인"이라고 체제 선전을 하면서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철저히 담보된다"고 강조했음.
- 이어 북한의 경제개발 특구 관련 사회주의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으며, 일시 이용할 경우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음.
- 특히, 기업 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동차세 등 9종류의 세금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책정했고, 공공시설 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광업, 호텔업 등 수익성이 높은 업종의 경영에 우선권을 준다고 전했음.
- 매체는 "외국 투자가들에게 경제지대에서의 일관성, 입출국의 간소화, 낮은 세금, 세금 면제 및 감면을 비롯한 특혜조치와 기업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국외송금 등을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법과 국제관례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소개했음.

그림 2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자료: 연합뉴스 2017.03.25.

연합뉴스. 北 "신의주특구, 매혹적인 투자 적지"…투자유치 홍보. 2017.03.25.

◆ 기타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1,414명으로 집계(잠정)

○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414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음. 2016년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208명임.

- 2009년 2,914명,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변화했음.

연합뉴스, 작년 한국행 탈북민 1천414명…김정은 집권후 첫 실질적 증가, 2017.01.03.

나진-하산 화물 운송량 증가

○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철도공사(RZD)를 인용 "2016년 극동철도를 통한 국제화물 운송량이 1,150만톤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3% 증가한 수치로 각각 북-러, 중-러 국경을 오가는 세 노선에서 화물 운송이 이뤄졌음.
- 이 중 하산-두만 구간을 거쳐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북러 국경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은 총 160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6.7% 증가했음.

○ RFA에 따르면 2013년 9월 전면 개보수를 거쳐 재개통한 나진-하산 구간 북러 국경철도는 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산 석탄을 반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

-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인 만큼,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그동안 철도를 통해 나진항으로 석탄을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나진-하산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을 추진해왔음.

뉴스1. 대북제재 속 지난해 나진-하산 화물 운송 36% 증가-RFA. 2017.01.20.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이 현지시간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었음.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피살. 2017.02.15.

국제금융거래망서 퇴출된 북한의 국영은행

○ 일부 북한 국영은행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되었음.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요청으로 최근 몇 주일 새 북한 일부 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전달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북한을 국제금융거래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려 하고 있음.
- SWIFT는 이날 유엔 조사관들이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들이 이 협회의 글로벌금융서비스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음.

○ 이번에 퇴출된 북한 금융기관은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 등으로, 이들 국영은행이 최근까지 SWIFT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이 확인했음.

세계일보. "北 3개 국영은행, 국제금융거래망서 퇴출". 2017.03.08.

미국의 중국 기업(대북 거래 기업) 벌금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ZTE가 미국의 대(對)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3,702억 원)를 부과했음.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에서 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미 상무부에 단속되었음.

동아일보. 사드 갈등속… 美, 北거래 中기업에 벌금폭탄. 2017.03.09.

평양 대동강맥주의 캔맥주 상품 판매 개시

○ 북한의 대표적 맥주인 평양 대동강맥주가 처음으로 '떼기식 통맥주'(사진) 형태로 출시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3일 보도했음. 떼기식 통맥주는 캔맥주를 뜻하는 북한 말임.

- 신문은 "2002년 조업한 대동강맥주공장은 황해도 보리, 양강도 홉, 대동강 지하수로 맥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떼기식 통맥주를 생산했다"고 전했음.
- 신문에 따르면 은색으로 된 캔 겉면에는 병맥주와 같은 모양의 대동강 청류다리를 형상화한 녹색 상표와 함께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보관기일은 6개월이며 양은 500mL. 신문은 "부드럽고 연한 맛이 특징이며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탄산도 병맥주의 맛 그대로 살아 있다"고 강조했음. 신문은 또 "대동강맥주의 종류는 현재 보리와 흰쌀의 배합 비율에 따라 5가지 맥주와 2가지 흑맥주로 나뉘며, 새로 만든 떼기식 통맥주의 배합 비율은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2번 맥주'와 같다"고 설명했음.
-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캔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동강맥

주의 라이벌인 만경대경흥식료공장의 경흥맥주는 2016년 4월 500mL 캔맥주를 처음 생산했고, 대동강맥주는 2016년 8월부터 캔맥주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음.

동아일보. 北 "떼기식 통맥주 생산"… 알고보니 캔맥주. 2017.03.15.

북한 남포항의 송유시설 확장

○ 미국 의회가 대북 석유봉쇄를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남포항 인근의 송유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밝혔음.

- RFA는 북한의 석유 수입 통로인 남포항 인근 모습을 미국 상업위성이 2015년 10월 4일과 1년 후인 2016년 10월 4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음.
- RFA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를 수입·저장하는 남포항 인근 수상송유시설(Oil Terminal)에서 1개였던 부두를 2개로 늘리는 증설 공사를 2015년 10월 이후 진행했음.
  - 북한은 두 부두 사이의 바다를 땅으로 메워 간척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곳에 송유·저장 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전했음.
  - 종전 정유시설 위쪽에 있던 논밭을 없애고 원형으로 된 8개의 시설을 새로 건설 중인 모습도 포착되었음.

매일경제. RFA "북한, `석유수입 통로` 남포항 송유시설 확장". 2017.03.26.

북한의 석탄광 신규 발견

○ 북한이 수십만 톤의 석탄 매장량을 새로 확보했다고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 27일 보도했음.

- 이 매체는 최근 북한의 봉천 석탄 탐사대가 평안남도 개천탄광, 봉천탄광 주변 지역에 매장된 수십만 톤의 질 좋은 석탄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 탐사대는 지표·갱도 조사를 통해 기존 탄광 지역의 지하 50m 인근에서 탄맥을 발견했음.

○ '조선의 오늘'은 "탐사대의 일군(일꾼)들과 대원들은 경험을 토대로 석탄 매장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과 수력발전 등으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北 "수십만t 규모 양질 석탄광 새로 발견". 2017.03.27.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2016년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량(354g, FAO 발표)

○ VOA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받은 북한 식량 배급량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6년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54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도의 하루 평균 배급량 335g보다 5% 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VOA는 설명했음. 그러나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59%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쳤다고 VOA는 강조했음.
-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지난 5년 동안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제공한 하루 평균 식량 배급량은 345g이었다고 VOA는 덧붙였음.

○ 실케 버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부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음.

연합뉴스. "북한 작년 식량 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남짓". 2017.01.06.

북한 시장의 가격 안정화 추세

○ 최근 평양에서 쌀 1kg 가격은 북한 돈 4,000원,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시에서 3,970원, 4,190원에 각각 거래돼, 1년 전 평양 5,019원, 신의주 4,970원, 혜산 4,980원에 비해 1,000원 가량 하락했다고 전했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2016년 9월에 있었던 홍수피해 이후 중국에서 많은 양의 쌀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의 벼농사가 잘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음.

○ 평안남도의 다른 소식통은 "2016년 말부터 (평남) 평성시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더니 2017년 4,000원까지 떨어졌다"면서 "시장 입구에서 농촌에서 들어오는 쌀을 받기 위해 늘어선 되거리(물건을 사서 곧바로 다른 곳에 넘겨 파는 일) 장사꾼들도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쌀의 양이 2016년 1월과 비교해볼 때 확실히 증가했다고 한다"고 말했음.

- 이어 "평양시 대부분 시장에서도 쌀 가격이 하락 추세이며 시장에 나와 있는 쌀의 70%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쌀"이라면서 "조선(북한) 쌀과 달리 중국에서 들여온 쌀은 한 해 이상 묵은 쌀처럼 찰기가 전혀 없고 푸석하여 조선 쌀과 섞어서 먹는 집들이 많다"고 설명했음.

- 소식통들은 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중국의 대량 쌀 지원 ▲북한내 벼 작황 호전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음.

데일리NK. 北쌀값 작년比 1000원 하락…"시장화·中교역 확대 영향". 2017.01.31.

2016년 북한 1인당 식량배급량(400g, VOA 조사)

○ 북한이 2017년 1월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8일 보도했음. 2017년 1월 식량 배급량은 2016년 같은 기간 배급량 370g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임. 그러나 유엔의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7%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쳤음.

- 스필른 대변인은 또 2017년 1월 북한 9개 도(道), 63개 군(郡) 82만 3,000여 명에게 2,56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1인당 식량배급량 400g…유엔 권장량의 67%". 2017.02.08.

북한 당국의 쌀값 상승 억제 시도

○ 북한 당국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사법 기관을 내세워 시장 가격 한도를 정하는 등 시장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소식통은 이어 "현재 북한 주민들의 관심사는 쌀값임. 쌀값이 2017년 2월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5,000원대 초반대까지 상승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사법기관들이 직접 가격 한도를 정했고, 보안원(경찰)들도 시장을 돌면서 가격을 올리지 말 것을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 당국은 2016년 중국산 곡물 수입으로 시장 쌀값 안정을 유도했음. 2016년 9월에는 8개월 수입량에 맞먹는 1만 6,000톤을 수입하면서 시장에서 쌀값이 하락하기도 했었음. 그러나 최근엔 쌀 수입량이 감소했고, 내부에서는 "수입쌀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소식통은 "농촌지역인 평안북도 용천시장에는 2016년 12월에 쌀값이 3500원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2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5000원대를 넘어섰다"고 소개했음.
-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은 판매 한도 가격(옥수수 1kg 1500원, 쌀 1kg 4200원)을 정해놓고, 이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무상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함.

데일리NK. 北, 내부 민심 다지기 총력…"쌀 1kg에 4200원 이상 받지마라". 2017.02.21.

북한의 식량 가격 하락 추세

○ 북한 장마당에서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식량 가격이 작황 호조와 환율 효과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음력설 이후 장마당들에서 kg당 북한돈 2천원까지 올랐던 통강냉이의 가격은 현재 1,300원선에서 멈췄다"며 "입쌀(백미) 역시 kg당 북한 돈 5,500원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질이 좋은 것은 4,300원, 질이 나쁜 쌀은 4천원"이라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식량 가격이 하락한 기본 요인은 무엇보다 2016년 농사가 잘된 데 있다"며 "여기에 2017년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국 인민폐 대 우리(북한)돈 환율도 식량 가격 하락에 큰 몫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음.
- 2016년 말 장마당에서 인민폐 1위안은 북한돈 1,300원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1,15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음.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식량의 상당량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 양강도의 다른 소식통은 "앞으로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인민폐 3.8위안, 북한 돈 4,300원에서 더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식량인 통강냉이 가격도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북한돈 2천원 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러나 이 소식통은 "식량 가격 하락을 이끈 인민폐의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식량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물가의 불안요소는 여전하다고 강조했음.

연합뉴스. "北 장마당 식량가격 하락세 반전…물가불안은 여전". 2017.03.17.

3 농림수산 일반

FAO, 북한 사막화 진행 발표

○ FAO는 최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삼림과 임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삼림 훼손이 심각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음.

- FAO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북한의 녹지대는 12만 7,000ha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음.

연합뉴스, FAO "北, 동아시아 최대 삼림 훼손국…사막화 심각". 2017.01.04.

38노스, 북한 농업환경 악화 및 농업 생산량 감소 분석

○ 38노스는 현지시간 5일, 2015년과 2016년 북한의 NDVI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음. NDVI는 위성 이미지 등을 이용해 식생의 유무를 파악해 수치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작물의 수확량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의 경우 남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조금 나아졌으나 7월 중순, 북한의 NDVI는 전국에 걸쳐 급격히 악화되었음. 서부 전역에 걸쳐 전년 동기 대비 식생의 분포량·활동성이 25~50% 가량 감퇴하였음. 북부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50~70% 떨어진 NDVI를 보였음.

○ 8월 말,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5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부와 남서부 일부 지역에선 20% 가량 떨어진 수치를,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에선 75% 넘게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음.

- 38노스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을 것으로 내다봤음. 한편, 수확기 무렵 기상조건 등을 종합해 북한의 농업 생산량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음. 북한 내부적으로 농업과 농업 생산량의 중요성이 컸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식량 안보에 있어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임.

그림 3 NDVI 북한 위성 이미지



자료: 중앙일보. 2017.01.07.

중앙일보. 38노스, "북한 농업환경 악화…생산량 감소". 2017.01.07.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선출

○ 북한 농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조직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위원장이 리명길에서 김창엽으로 교체되었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농근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개최됐다며 "회의에서는 리명길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창엽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위원장 교체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김창엽의 이력 등은 밝히지 않았음.

연합뉴스. 北 농근맹 위원장 리명길에서 김창엽으로 교체. 2017.03.30.